

건설동향브리핑

제465호 (2014. 6. 16)

■ 경제 동향

- 1~4월 국내 건설수주 37.4% 증가

■ 정책 · 경영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 총량 분야의 주요 내용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의 주요 내용

■ 정보 마당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방안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세로토닌형 건설 문화를 만들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4월 국내 건설수주 37.4% 증가

- 5개월 연속 증가, 기저 효과 및 공공 부문 수주 급등세에 기인 -

■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한 31.5조원으로 비교적 양호

- 국내 건설수주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 회복세를 보임.
 - 국내 건설수주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4개월 연속 감소해 외환 위기 기간인 지난 1997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17개월 간 감소한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함.
 - 이후 2013년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44.9% 반등해 감소세를 마감하였는데, 11월에 다시 1.2%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음.
 -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냄.
- 2014년 1~4월 간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한 31.5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임.
 - 2012년 1~4월 간 수주액인 33.2조원보다는 낮은 실적이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13년 간 1~4월의 수주액 평균이 28.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최근 국내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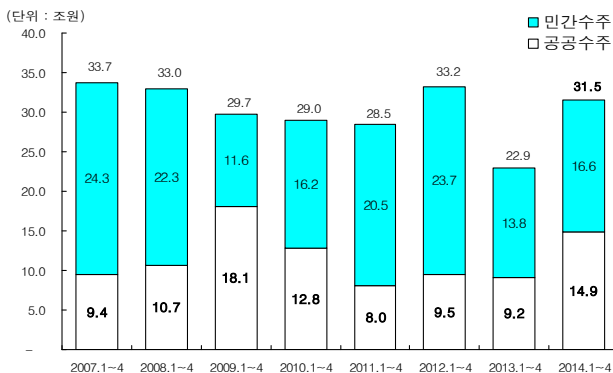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1/4	-35.1	-9.0	-14.8	3.7	-56.7	54.3	-45.5	-69.2	-34.6	-47.6	-20.1
	2/4	-22.9	5.4	9.2	-0.8	-41.7	24.8	-33.5	-52.9	-26.4	-27.0	-25.7
	3/4	-4.4	4.2	5.1	3.1	-42.2	41.8	-8.9	-29.6	-4.4	-11.2	5.4
	4/4	24.7	17.2	24.1	11.7	12.1	11.5	31.0	27.5	31.9	42.8	19.4
	연간	-10.0	6.1	6.1	6.1	-21.5	26.6	-18.2	-41.4	-10.6	-13.0	-7.6
2014	1월	58.6	74.6	120.4	-4.7	-70.2	42.0	46.3	-39.0	85.4	277.4	-18.4
	2월	38.6	116.2	148.6	47.1	161.8	33.9	-5.2	-5.8	-5.2	-11.6	0.8
	3월	17.1	51.4	62.6	32.7	189.0	17.4	-6.1	-57.7	3.1	26.2	-12.4
	4월	42.5	24.6	23.1	29.7	390.2	4.1	54.6	89.8	49.8	73.3	17.6
	1~4월	37.4	63.0	80.2	26.3	45.9	22.4	20.4	-11.4	26.5	60.1	-3.0

자료 :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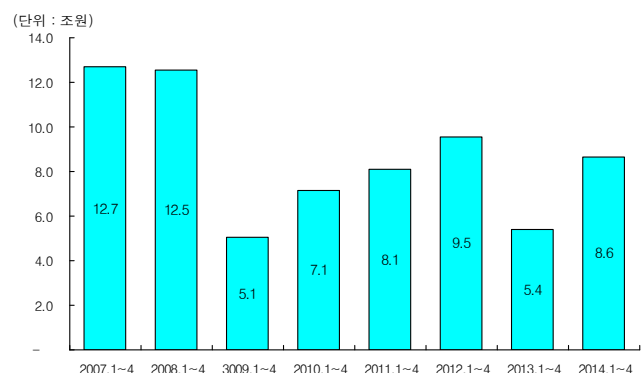
■ 기저 효과 및 공공 부문 수주 급등세에 기인

- 공공 부문에서는 모든 공종의 수주가 증가해 전년 동기비 63.0% 급등함.
 - 공공 토목수주는 그동안 지연된 도로 공사의 발주가 증가하고, 일부 발전소 관련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2% 증가한 11.2조원을 기록함.
 - 공공 주택수주는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45.9% 증가한 0.7조원을 기록.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1~4월 누적치로는 역대 최대인 3.0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
- 민간 부문은 주택수주가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16.6조원을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8년래 최저치인 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함.
 - 민간 주택수주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규 주택 수주가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60.1% 증가한 8.6조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6.0조원으로 전년 동기비 3.0% 감소함.
- 결과적으로, 2014년 1~4월의 건설수주 회복은 기저 효과 및 공공 부문 수주의 급등세에 기인함.
 - 비록 민간수주가 전년 동기비 20.4% 증가했지만, 수주액 자체는 2011~12년 간 1~4월의 실적보다 부진하고, 최근 5년치 평균액인 17.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 16.6조원으로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1~4월 공공수주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발주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 2009년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14.9조원을 기록, 올 전체 수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1~4월 전체(공공 및 민간) 수주 비교>



<연도별 1~4월 민간 주택수주 비교>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 분야의 주요 내용¹⁾

- 우리나라 SOC 스투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특단의 SOC 투자 대책 마련해야 -

■ 중기 자원 배분의 전제

-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비해 SOC나 산업과 같은 경제 지출, 교육 지출, 국방 지출 등 여타 항목은 크게 변화되지 않음.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경제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낮고, 사회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총지출의 2013~17년 연평균 증가율은 3.5%인데, SOC(-5.7%), 산업·중소기업·에너지(-3.9%), 농림·수산·식품(0.3%)은 증가율이 낮음.
 - 이에 비해 보건·복지·노동(7.0%), 교육(5.7%)은 증가율이 높음.

■ 중기 자원 배분의 기본 방향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같은 경제 분야 지출의 정상화(실질적으로 축소) 모색
- 복지, 안전, 문화 분야는 맞춤형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세대별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해소 등 생애주기·수혜 대상별 맞춤형 고용·복지를 강화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
 - 사회보험 사각 지대 완화 등 사회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문화 재정 2% 달성
 -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선, 재난 대응 교육 훈련 강화, 새로운 재난 대응 기술의 확보를 위한 R&D 등에 대한 지원 확충

1) 본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5일에 개최한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총량 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건설산업 관련 부분을 발췌·정리하였음.

- 이에 비해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분야는 4대강 사업 및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모색
- 경제 분야의 지출 축소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보완하고, 기존 시설 운영의 효율화, 민간 관리 기법의 도입, 투자 우선 순위 조정 등으로 재정투자의 내실화 모색

■ SOC 분야의 투자 방향

- SOC 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건설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 유지
 - 도로는 교차로 개선, 오르막 차로의 신설 등 시설 개량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구축 등으로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
 - 철도는 주요 국가 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철도 운영의 효율화 도모
 -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 시설 개량 우선 추진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 제고
-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교통 사고 빈발 장소 및 위험 도로의 개선, 노후 철도 시설 개량, 교통 안전 교육 강화 등 교통 안전 투자의 확대, 지역 간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 교통 체계의 확대 등 교통 수요의 집중 관리
-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항만 개발,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SOC 투자의 적정 규모 유지 등 혁신적 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SOC 재정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전체 SOC 투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민간투자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어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SOC 스톡의 축적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SOC 재정투자는 유지되어야 함.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의 주요 내용¹⁾

-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 복원에 중점 -

■ SOC 시설 노후화 및 유지보수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SOC 교통 분야 시설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개 SOC 시설의 평균 고령화율²⁾은 9.3%에 달함³⁾
 - 도로의 교량, 터널, 항만, 옹벽의 고령화율은 6.3%, 철도옹벽은 60.5%, 철도교량은 28.5%, 철도터널은 8.5%, 댐(저수지 포함)은 55.9%, 하천시설은 20.1% 수준
- SOC 교통 분야 유지보수 투자는 2010년 기준 약 3.02조원으로, GDP의 0.26%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서유럽은 GDP의 0.3%를 SOC 분야의 유지보수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투자비의 약 30%를 차지

<한국의 SOC(교통) 유지보수 투자 추정(2010년)>

구분	GDP	도로 부문	철도 부문	합계
투자액(조원)	1,173	2.21	0.81	3.02
GDP 대비 비중(%)	100.00	0.19	0.07	0.26

자료 : 국토교통부,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 2012. 12

-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및 관리가 미흡함.
 - 이에 따라 실제 사용 연한보다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회복 및 수명 연장을 위한 향후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설물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 수준으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SOC 시설의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⁴⁾

■ 노후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예방 보전적 관리 개념의 도입

1) 본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5일에 개최한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SOC 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부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고령화율은 SOC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완공 후 30년이 지난 SOC 시설의 비율을 의미함.

3) 현대경제연구원,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2013. 4

4)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관리 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2010, 11

- 손실 발생 후에 대책을 실시하는 ‘사후적 관리’에서 조기 발견 · 보수를 통한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예방 보전적 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SOC 시설의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
- SOC 유지관리 거버넌스(Governance)의 확립
 - 현재의 관리 체계는 SOC 관리 주체 및 관련 법령이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가 전체 SOC 시설을 총괄하고 SOC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SOC 유지관리 평가 시스템의 구축
 - 노후화된 SOC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노후화 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투자 재원 확보 방안
 - 정부 세입의 감소 및 타 부문에 대한 경직적인 예산 소요로 인해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시설 관리 주체와 이용자 모두 시설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
 - 민관 협력 프로젝트(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노후화 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향후 SOC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예산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전체 SOC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SOC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축소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증액 효과가 아님.
- 재정 확보 방안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매우 위축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성공적인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맞는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방안¹⁾

- 조정 대상 확대 및 건설분쟁회원고충기구 설치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 2013년 8월 「건설법」 개정으로 건설 분쟁 조정 활성화 기반 구축

- 조정 제도는 중재 제도와 함께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처리의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건설 관련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그동안 조정 효력의 미약과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2013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폭 개선·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음.

<건설 분쟁의 조정·중재·소송 이용에 따른 비교>

구분	조정	중재	소송
대상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에서 공사 계약이나 하도급 관련 분쟁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분쟁 유형 열거	- 당사자 간 합의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사안	-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로 인한 개인 사이의 분쟁
적용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등	- 「중재법」, 중재규칙 등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민사소송법」 등
자율성 (당사자의 의사 반영)	- 상당히 큰 편	- 중재 판정부 구성 등 절차적 측면에 국한	- 거의 없음
우호적 해결 가능성	-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 가능성이 큰 편	-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 가능성 있음	- 재판상 화해 가능성도 있지만 크지 않음
당사자의 신용 및 영업상 비밀 보호	- 비공개 원칙	- 비공개 원칙	- 공개 심리 원칙
신속성·경제성	- 상당히 큰 편	- 큰 편	- 상당히 적은 편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정 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제도적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건설법」 개정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현행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분쟁 조정의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현재 「국가계약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4년 6월 3일에 발간한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법」·「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대상 제외로 공공공사로 인한 분쟁은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사안도 마찬가지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요건이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조정위원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있어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조정위원의 결격 사유(영 제68조 제3항)와 제척·기피·회피(영 제68조의2) 등 자격 요건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의 근거는 「건설법」에 마련되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무산으로 당분간 사무국의 설치·운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건설 분쟁의 조정 제도 이용률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조정 대상 확대, 사무국 조기 운영, ‘건설분쟁회원고충기구’ 설치 운영 등 보완 필요

- 조정 대상의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함. 현행 「건설법」 제69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제3호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공사와 관련한 분쟁 및 하도급 관련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정의 공신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다른 분쟁조정위원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의 신분 보장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여부는 사무국의 현실적인 설치·운영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국의 실질적인 설치·운영을 서둘러야 함.
- 그 밖에 건설분쟁조정제도가 발아 단계나 다름없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건설업계 차원에서라도 조정 절차 이용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칭)건설분쟁회원고충기구’의 설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11	국회 안중범 의원실	•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6. 13	국토교통부	•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관계 부처 합동 TF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201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4년 6월 26일(목) 14:00~17:00
-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201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발제자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발제자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스페셜 세션 : 미분양 지역 수요자 특성 분석
(발제자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문의 : 기획지원팀(02-3441-0883, 0896) ※ 사전 등록 필수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일정 : 2014년 9월 23일(화)~25일(목)
-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기업 SOC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세로토닌형 건설 문화를 만들자

50종이 넘는 인간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마음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로 도파민(또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질을 쾌적 물질이라고 부른다.

인간 마음을 연출하는 이 세 가지 물질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도 연결된다.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형과 열광적인 엔도르핀형의 사회는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다. 경쟁과 열정을 동반하는 이 물질들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따라서 성장기 사회에서는 순기능적이다. 그런데 사회가 성숙 또는 정체기에 진입하게 되면 과도한 노르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의 분출은 역기능을 더 많이 제공한다. 사람들의 이기적 경쟁심과 걱정적 태도는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제공하기 보다는 폭력성과 집단적 우울증을 더 키우고 만다.

반면, 세로토닌형 사회는 단기적 성장과 역동성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결과 지향적 도전보다는 과정 지향적 창의성을 더 선호한다. 성숙기로 진입한 시점에서 안정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세로토닌 문화를 키우지 못하면 급격히 공격 일변도의 노르아드레날린형 문화로 빠져들고, 그 결과 그 사회는 쇠퇴하고 만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 성취에만 열광하는 엔도르핀형 문화를 바꿀 때가 되었다. 차분하게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보다 세분된 시장에서 소프트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안정 지향의 세로토닌 문화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 못지않게 협력을 존중하는 세로토닌 문화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가 세로토닌형 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민, 즉 수요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주택 등 시설물을 투자의 수단이 아닌 거주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건설기업 및 산업의 내부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빨리빨리, 명령 지시와 같은 엔도르핀과 노르아드레날린형 문화로는 고급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우리 건설산업은 지금 안팎으로 세로토닌형 문화로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건설경제, 2014. 4. 16>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